

“도 차원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안전대책 마련을”

강동화 도의원, 도정질문서 “전기차 대중화 위해 충전 인프라 구축 필수”

탄소중립 핵심정책의 일환으로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전기차 보급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인프라 시설인 충전시설의 보급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북도의 적극적인 정책추진이 요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강동화 의원(전주)은 8일 제401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현재 전북도의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대응 매뉴얼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GM, 폭스바겐 등 대표적인 자동차 업체들은 단계적으로 내연기관 차의 생산공장을 계획하고 있고, 전기차의 성능 향상 등으로 많은 운전자들이 전기차 구매를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전기차에 대한 구매 의사는 점점 높아지는 반면 전기차 운행에 필수 시설인 충전시설의 보급률은 낮아 전기차 대중화를 위해 충전 인프라 구축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지난 2021년 7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의무설치 규정이 강화되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올해 1월 27일까지 국가 및 지자체 등 공공이 소유·관리하는 시설의 경우 법과 조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2024년 1월 27일까지 공공이 용시설로, 그 이듬해에는 공동주택까지 의무비율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

해야 한다. 하지만 강동화 의원은 전북지역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시설의 경우 연내 법적 의무 비율을 충족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월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도청 및 14개 시·군의 경우 의무설치 대수 1,090대 중 513대가 설치되었고, 전북도교육청의 경우 14개 기관의 주차장에 31대 중 7대 설치가 전부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법 시행 이후 1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었음에도 충전시설 설치에 공공기관이 얼마나 소극적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며 “정책 추진을 위해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 조차 의무대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이나 공동주택에 관련 법률을 강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도지사는 “예산확보, 설치기간 등으로 1년 이내 완료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의무 수량의 47%인 513기를 설치하는데 그쳤다”며 “환경부 공모 사업과 도 자체사업 등을 통해 연내 의무설치 비율 이상을 충족하겠다”고 밝혔고, 서거석 교육감 역시 “지난 1월 27일까지 기관들에 대한 충전시설이 설치완료 되었어야 하나 한국전력공사의 인입공사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며 “2023년 본 예산에 관련 예산을 편성한 만큼 의무설치 학교 및 기관의 충전시설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강 의원은 “올해 도내 학교에 설치될 충전시설의 경우 전주 21대를 비롯해 총 47대가 설치될 예정이고, 관련 예산은 36억3,700여만원이 편성되어 있다”며 “이들 학교 중에는 주택가 밀집 지역이나 도민들의 접근성이 좋아 도민들에게 개방이 용이한 곳도 많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서 교육감에게 학교 내 설치되어 있는 충전시설에 대해 학생들이 하교한 이후 저녁시간 대 도민들에게 개방하는 방안이 대한 생각을 물었다.

이에 대해 서 교육감은 “교육청은 학교가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하기 위해 학교 시설 개방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충전시설은 관련법에 따라 개방 의무가 없는 시설이긴 하나 가능한 한 개방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전기차 충전시설과 관련, 최근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지하주차장 충전시설 화재에 대해 도 차원의 선제적인 예방 정책이나, 대응 지침 및 매뉴얼이 수립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위험성에 대해 적극 공감을 표현하며, 전북도에서도 현재 전기차 화재의 위험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침수 등 전문 진압장비를 구입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재훈 기자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송기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버리, 북한 해킹 관련 등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및 후쿠시마 검검특위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개최한다는 여야 합의의향을 발표하고 있다.

여야, 선관위 국조·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 합의

특위 위원장… 국조는 국힘·오염수는 민주

여야는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및 북한 해킹 은폐 의혹 관련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국회 차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문회도 열기로 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여야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국회는 선관위 인사버리, 북한 해킹 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 조사를 실시한다”며 “다음주 중 조

사요구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주 본회의(21일) 승인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송 수석부대표는 “국회는 후쿠시마

특위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개최한다”

며 “다음주 중 특위 구성안을 본회의에 제출하고 의결을 거쳐 이후 특위 위원을 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특위는 민주당에서 각각 맡기로 했다.

이 수석은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될 경우 6월 말 특위가 가동될 것으로 예상했다. /뉴시스

“도내 수소버스 도입, 혈세로 만들어진 성과”

최형열 도의원, “수소전문인력 확충, 2차전지·수소산업 육성 위한 에너지 공사 신설해야”

전북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더불어민주당)은 8일 제401회 정례회에서 김관영 지사를 상대로 “40대가 넘는 수소버스 도입은 타 시도의 2배에 이르는 보조금으로 만들어진 성과”라며 보조금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480억원이 투입된 전주 원주 수소시범도시가 도민이 체감할 수준의 성과는 없다”며 “45대의 수소버스 도입이 성과로 보도되고 있지만 실상은 타 시·도의 2배에 해당하는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며 만들어진 성과에 불과해 도민의 혈세인 보조금 지원안을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전북도는 지난해까지 수소버스(저상) 1대당 보조금을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 17개 시·도 중 최고 수준인 2억4,000만원(국비제외) 지원했고 올해 기준으로 11개 시·도(9,000만원)보다 2배(1억8,000) 더 지원하고 있다.

또 수소차(승용)의 등록 대수가 인구 110만의 울산 수소시범도시의 약 2,700대인데 반해 전북은 인구가 40%(176만) 더 많고 지난해까지 지원



액이 약 20% 더 지원했음에도 수소차 등록 수는 울산의 78% 수준인 약 2천 대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소산업 전주 기 육성 토대 마련을 위해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은 필수불가결한 사업이라며 이번 달 있을 예비타당성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수소전문인력 확충, 이차전지 및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제주도 에너지공사 같은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2022년 농가경제조사 결과 전북 농가소득은 4,291만 원으로 1년 전보다 9.8%(454만 원) 줄었고, 농업소득은 경남에 이어 전국 최하위인 825만 원으로 전년 대비 46.5%(610만 원)나 감소해 전북 농가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며 획기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더불어 최 의원은 산업은행 부산이 전이 지정된 것과는 달리 지난날 31일 발표된 제8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안에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의 배제와 전라북도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 전방위사업청장 등 금융과는 무관한 위원들의 포함을 지적하며 추진 의지를 따져 묻고 혁신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부산시의 산업은행 이전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최형열 의원은 “전북도가 오랫동안 공을 들여온 한국투자공사를 부산시가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확정되기 전에 전북 이전 문제를 확실하게 매듭짓지 않으면 끝판왕을 놓칠 수 있다”며 공격적인 유치 전략과 함께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답변에 나선 김관영 지사는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인력 확충과 수소버스 보조금의 단계적 조정을 발표했다.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전문가를 참여시킨 TF팀 구성 검토 및 한국투자공사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전북특자도 성공, 탄소중립 선도에 달려”

한정수 도의원 “수소산업·재생에너지 특화해야”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한정수 의원(익산 4)은 8일 제401회 정례회에서 전라북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방향과 정책에 대해 김관영 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실시했다.

한정수 의원은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후생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탄소중립 실현은 경제·산업의 문제이며 인류 생존의 문제”라면서 “전북도가 즉각 실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준비가 부족하다”고 했다.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지방정부는 내년 4월까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현재 전북도는 연말까지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안을 가지고 있지만, 탄소중립 목표달성과 선제적 대응차원에서 전북도의 준비와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한정수 의원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북도의 핵심 전략산업으로 수소산업과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새만금신항을 수소특화항으로 개발하고 수소기술인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만금과 재생에너지 등 전북이 가진 강점을 살려 가칭 전북특자도 재생에너지 공사를 설립해 탄소중립 이행에 앞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전북도가 특자도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향후특자도 출범 이후에 전라북도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단을 설치해 탄소중립에 적극 대응하고 전북특자도가 탄소중립을 통해 성공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관영 지사는 “선제적 대응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특례, 전력거래 특례 등 관련 특례를 적극 발굴 중에 있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공사와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단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공감한다”라면서 “정부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